



참여정부 출범 100일

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

I. 참여정부 출범(03. 2. 25) 전후의 대내외 경제여건

❖ 참여정부는 미-이라크 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경기가 점차 위축되는 상황에서 출범

■ 대외적으로는 각종 악재가 연이어 발생

- 미-이라크 전쟁 등의 영향으로 03.1 ~ 5월간 평균유가가 26.6\$로 작년 동기보다 21.1% 상승
- 북핵문제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의 불안감이 고조
 - ※ 무디스는 우리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'긍정적'에서 '부정적'으로 조정(2.11)
-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사스의 발발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욱 지연

■ 대내적으로도 02년말 이후 국내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경제 전반의 불안도 확산

-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가 크게 부진
- 급속한 가계대출 증가의 휴유증으로 카드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불량자도 지속 증가
 - ※ 신용불량자수(만명) : (12)264 → (03.1)274 → (2)284 → (3)296 → (4)309

-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(3.11), 카드채 문제 등으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발생하고 채권시장이 경색
- 북핵, SK글로벌 사건 등의 영향으로 한 때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등하는 등 우리경제의 건전성에 관한 우려가 증폭
 - * 외평채 가산금리(bp) : (02말)113 → (03.2.11)134 → (3.12)197 → (6.2)83

II. 출범 100일간의 평가

- ❖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상황변화에 따라 적기에 시행
- ❖ 그러나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음

1. 경제정책운용의 성과

- 미-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
- 사전에 마련된 미-이라크 전쟁 비상대책에 따라 적기대응

- 유가 인정을 도모하고 해외건설·항공·해운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

- 대통령의 방미, 경제·외교안보팀 합동의 적극적인 국가홍보(IR) 활동을 통해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

- 이에 따라 외평채 가산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

* 외평채 가산금리(bp) : (02말)113 → (03.2.11)134 → (3.12)197 → (6.2)83

■ 경기악화에 대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

-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작년보다 총 10조원 확대(73.7조원 → 83.7조원) 집행
- 환경,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경직적인 투자관련 규제들을 개선하여 투자활성화 유도(3~4년간 총 17조원의 투자 기대)

■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 대처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

- 환매채 매입(2조원) 등을 통하여 SK글로벌 사건에 따른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사태를 조기에 진정
 - * 투신환매규모(조원) : (3.11~31)△26.7 (4.1~30)△8.2 (5.2~30) +1.7
- 카드채 만기연장, 대주주 증자(4.6조원), 영업수지 개선 등을 유도하여 카드사의 유동성 문제에 대응
- 소득증가 속도에 맞추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증가를 유도
 - * 은행가계대출 증감(조원) : (02평균)5.1 (03.1)△0.3 (2)2.7 (3)2.4 (4)3.1
 - * Fitch사도 우리나라 가계대출 수준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(5.15)
-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
 - * 채무면제기간을 최장 5년 → 8년으로 연장 등

■ 서민·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

-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4월 이후 물가가 안정
 - * 소비자물가(전월비,%) : (03.1)0.6 → (2)0.6 → (3)1.2 → (4)△0.2 → (5)△0.2
- 전월세자금 금리 인하(연 6.5→5.5%, 4.21), 임대주택 택지조성 절차 간소화 등 서민·중산층의 주거안정 추진

■ 주요 개혁과제별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

-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확정(4.15)
- 시장개혁·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논의과제와 작업방향 등을 결정
 - * 출자총액 제한, 지주회사제도, 산업·금융자본간 차단장치 보완 등

2. 제기된 비판과 향후 대응방향

(1) 부처간의 정책조율과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

-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공개된 사례도 있으나, 과거와 달리 토론을 통해 대안을 활발히 모색하는 과정이 혼선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음
- 앞으로 경제팀이 일체가 되는 시스템에 의해 정책을 협의 결정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, 홍보 노력도 강화

(2) 주택시장의 불안이 재현

-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
- 이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부족,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자금의 유입, 재건축 아파트와 행정수도 건설 등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
-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
 - 대대적인 세무조사,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,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 마련(5.23)
 - ※ 5.23 대책이후 급등하던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꺾이고 분양 시장도 크게 안정되는 모습
 -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투기억제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시중유동성을 증시 등으로 선순환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

(3) 노동문제에 대해 노조편향적이라는 비판

- 정부의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사회적 득실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임
 - 두산중공업사태는 노사의 극단적 대립으로 파국이 우려되는 특수상황이어서 정부가 중재
 - 철도노조 반발로 민영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망(網) 산업의 특성(자연독점) 등을 감안하여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운영부문을 공사화하기로 한 것임
 -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문제는 불합리한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물류대란의 장기화로 입을 사회적 피해와 국가신인도 저하 등을 감안하여 대응
-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계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
 - 파업 등 사회적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지나친 요구를 들어주는 일은 지양하고 이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갈

(4) 경제·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위기대응 체제가 미비

- 집단행동 등으로 국가적인 경제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

-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
- 국가경제나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할 경우 인력·장비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

3.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

- 현재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인 경기가 하강하는 어려운 국면이기는 하나 경제위기라고 볼 상황은 아님
 - 미-이라크 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와 경제심리의 위축 등으로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부진
 - ※ 03.1/4 성장률(전년동기비, %) : 한국 3.7, 미국 2.1, 일본 2.7, EU 0.8, 대만 3.2, 싱가포르 1.5, 중국 9.9
 -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여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개선
 - ※ 제조업부채비율(%) : (97) 396.3 → (02) 135.4
 - ※ 외환보유고(억불) : (97) 39.4 → (03.5.15) 1,262.4
- 사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
 - 최근의 경기둔화는 과도하게 증가하였던 소비가 조정되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조정이 점차 완료되어 하반기에는 내수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 -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현재 추진중인 추경 편성 등 안정 정책의 효과가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임
 - ※ 추경 4조원 편성시 향후 1년간 GDP 약0.5%p 정도 상승 효과 기대
 - 아울러 선진국의 적극적인 경기진작 대책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
- 카드채가 금년 하반기에 대규모로 만기도래하나, 카드사의 자구노력 등으로 시장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음

- 4.3대책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대주주 증자(4.6조원), 영업수지 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
 - ※ 상반기 증자계획(2.8조원)은 국민카드 증자계획을 제외하고는 이미 증자를 완료하였거나 증자 절차가 진행중
 - ※ 국민카드는 국민은행과 합병(5.30 발표)
- 카드사의 시장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채무상환 능력과 단기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자구노력*을 마련하여 실천중
 - ※ 자체적인 만기연장 프로그램, 적극적인 IR, 하반기 증자 계획(1.8조원)의 9월이내 조기이행 추진 등
- 최근 투신사 수신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카드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카드사에 대한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
 - ※ 투신수신증감(조원) : (3.11~31)△26.7 (4.1~30)△8.2 (5.2~30) +1.7
 - ※ 4.3대책후 3개 상장카드사 주가 29%상승(5.30일 기준, 종합지수 16% 상승)

III.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 운용방향

❖ 그동안 마련한 경제운용의 틀에 국민들의 피부에 외닿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 추진

1. 당면한 경기안정을 위한 정책대응

가. 적극적인 경기안정대책의 추진

-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.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6월 임시국회에 제출
- 침체된 경기의 회복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계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편성
- SOC 등 인프라 구축(1.5조원), 서민·중산층 지원(0.7조원), 수출·중소기업지원(0.4조원) 등 중점지원

나.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·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

-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 근본적인 안정대책 추진
-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방안 등 과세제도 개선방안 마련 (6월말까지 시안 마련)
- 연금여 3천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5%p 인상 추진 (04.1 시행)
-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운송직 근로자(화물차·버스·택시)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(03.7부터 시행)

다.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

- 기업투자활동과 관련한 규제·관행·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의욕을 적극 뒷받침
- 규제개혁위, 국가균형발전위 등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
-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
-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하
 - ※ 철강, 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무세화, 원유관세율 인하 (5% → 3%)
-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추진(12% → 10%, 04.1시행)
- 중소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15%)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추진 (04.1 시행)
- 중소·벤처기업의 M&A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절차 등 M&A 제도를 개선

라. 금융시장의 안정

- 카드사의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도록 유도
- SK글로벌은 채권단 자율적인 판단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시장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
-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
- 한국주택금융공사(04.1 출범)를 설립하여 중장기적

으로 주택담보대출의 1/2이상을 20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

- 개인신용평가기관(Credit Bureau)을 활성화

마. 자본시장의 기반 확충

-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
-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적극 유도(03 하반기)
- 기업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구조지수(03.9월중)를 개발하여 유용한 투자판단 기준을 제시
- 증권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· 주식시장을 Up-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 · 을 실시
- 일시적인 국제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정부가 국제(환매조건부)를 추가 발행하여 대어

바. 개방화 · 국제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

-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을 조속히 마무리(6월 임시 국회)
- 일본 · 싱가포르의 산 · 관 · 학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하고, 기타 멕시코, ASEAN 등과의 FTA 추진도 검토
-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
 - ※ 추경편성안에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으로 1,157억원 반영
- DDA 협상이 일괄 타결 방식임을 감안하여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

2. 시장개혁의 일관성있는 추진

-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
- 시장감시장치와 소유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
- 원활한 지주회사 설립 ·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유예기간 연장 등 보완방안을 마련
-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

서 잘 전달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,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인정시한(04.2) 연장도 검토

-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
-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, 계열금융회사 연계검사 등 기존 감독 · 제재수단을 활용
- 대주주와 거래시 이사회이결 확대,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영공시 강화 등을 통해 제2금융권의 투명성을 제고
- 대주주 변경시 출자자 자격요건 적용, 대출한도의 축소 등으로 산업자본 부실이 금융기관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
-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는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다른 대안과 함께 중장기적인 도입방안을 검토
-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, 회계시스템 개혁을 통하여 투명한 기업경영과 시장질서를 확립

3.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

- 균형과 자율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정착
- 금년중 노사관계 제도, 의식, 관행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노사정위를 통해 노사관계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
- 노사관계법 · 제도를 노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정비
-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(5.10구성)에서 금년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입법 추진(04년)
-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구현
-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 · 근로시간 등 개별기업 차원의 고용유연성을 제고
- 다만, 기업고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

-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구인·구직 연계 인프라를 확충
- 고용형태의 유연화와 함께 비정규직의 남용과 부당한 차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

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

- 실업·재해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
- 고령자·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능력을 높이고 근로복지를 내실화

4.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

❖ 참여정부의 100일은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추진시스템을 정비하는 기간이었음

-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태스크포스가 발족
 - ※ 위원회(3) : 동북아경제중심추진, 정부혁신·지방분권, 국 가균형발전
 - ※ 사회통합기획단(3개 T/F) : 빈부격차와 차별시정, 노동개혁, 농어촌대책
 - ※ 기획단(1) :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

■ 국정 과제들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이므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

- 국정과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비전이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
- 과제의 범위가 국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내용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입법도 필요

- 100일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국정과제별로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방안을 마련
- 시스템을 토대로 일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확정된 방안은 차질없이 추진

가.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

■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, 우수한 인적자원,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·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 추진

-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(03.7.1)하고 03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
- 대부분의 외환규제를 2단계에 걸쳐 완화·폐지하여 07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선진화

■ 핵심 물류시설 확충, 관세자유지역 개발 등으로 핵심 물류거점을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

-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을 추진(08년까지)하고 인천항, 송도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핵심 물류거점으로 개발
- 부산신항·광양항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인천공항(30만평), 부산신항·광양항 배후단지(232만평)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
- 선진 물류기업의 유치, 물류시스템의 운영 개선 등으로 국내의 물류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전국 5대 권역별 거점 수송체제를 구축

■ 과학기술 육성, R&D를 접목한 산업의 첨단화·고부가가치화로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

- 다국적기업의 R&D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에 주력
- 기업 연구클러스터의 발전방안도 마련

나. 국가균형발전

■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(03년중)

- 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마련
-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, 재원 등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신설

■ 지역전략산업 진흥과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

- 지역별 전략산업관련 시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· 지역특화발전특구 · 제도 도입을 추진
- 산 · 학 · 연 · 관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지역 운영후 전국적으로 확산
-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개발 주체를 균형있게 육성

■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

- 일정기준 이하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기해 나가는 전국최소기준 관련정책을 개발
-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입안부터 완성단계까지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
- 실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정부투자 ·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 추진
- 수도권과 지방의 win-win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

다. 정부혁신과 지방분권

■ 체계적인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

- 분권형 조직설계,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
- 지방분권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'선분권 후보관'의 원칙하에 추진

■ 재정 · 세제 개혁을 추진

- 3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, 성과관리제도 도입, 특별회계 · 기금의 정비 등 지출분야의 효율성 제고
-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, 자영업자 소득과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, 중앙 · 지방간 재원 조정 등 세입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
- 통합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, 국가채무관리 · 평가시스템 구축 등 재정관리 체제를 정비

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

-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(G4C), 국가통합전자조달시

스템(G2B) 등 기 구축한 시스템을 고도화

- 범 정부차원의 통합전산환경 구축, 정보보호체계강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
 - 기업지원 통합시스템(G4B), 전자국회, 통합외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가과제를 발굴
- 공기업,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
- 공기업 구조개혁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,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
 - 산하기관의 기관장 · 임원 선임의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
 - 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· 강화

라.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

- 국민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
-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

- 여성,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, 자활지원사업을 강화

- 노숙자, 쪽방생활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

-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하고,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격차(Digital Divide)를 해소

- 사회통합인프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

마.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

- 노령 · 영세농어의 탈농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어업 체제를 정착

- 유통 · 가공업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관광 기반확충 등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
- 소득보전직불제,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

해 개방화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

-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
- 전국 100가구 이상 모든 주거지역에 금년중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
- 2005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 추진

바. 실행정수도 추진

- 금년말까지 [실행정수도 기본구상]과 [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]을 마련하고, [실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(가칭)]을 제정
- 후보지 선정·평가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하반기중 예정지를 발표
-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실시계획을 수립
-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,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를 개시

사.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건설

- 10년후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핵심기술 발굴 추진
 - 과기부, 산자부, 정통부 등 각 부처별로 미래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을 수립
 - 7월말까지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
- 우수 과학도비 초청 특별연구 추진, 동구관·개도국 등의 석·박사 과정 학생 유치 등 동북아 R&D 허브를 구축
-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의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
-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을 혁신
 -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지방정

착을 지원

- 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 기술기반을 확충
-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
- 21세기 지식·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핵심 전략분야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
-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, 과학기술인 사기진작,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
- 비록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음
-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
- 그동안의 구조조정으로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도 과거와는 달리 충실함
- 또한 참여정부의 새로운 정책추진 방식이 정착되면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임
- 각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 당면한 경제현안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각 경제주체에게도 이익이 되는 길임
- 정부는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대응 노력을 지속
 - 특히, 앞으로 경제분야는 경제팀이 일체가 되는 시스템에 의해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
- 기업은 경영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쌓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확대
- 근로자는 집단적 행동보다는 합리적 대화를 모색하고 생산성 향상 범위를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에 협조
-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며 부동산 투기와 같은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윤리의식을 확립

- 재정경제부에서 발취

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(www.mofe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